

## 낙농조합 총량제 운영지침의 실상을 공개한다!

- 1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진흥회 공개질의서에서 밝힌 바대로 우리가 입수한 낙농조합 총량제 운영지침의 실상을 공개한다. 이는 진흥회의 회신이 정의없는 답변차원을 넘어서 우리 낙농가를 무시한 처사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농가 생존권 확보와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바이다.
- 2 어떻게 보면 낙농조합 총량제 운영지침은 진흥회의 말대로 현재로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분명하다. 하지만 단지 밀어붙이기식 일부지역 직결전환이 유보된 마당에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며,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언제 또다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농가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 3 무엇보다 운영지침 제정은 합의도 되지 않은 농림부시안에 따라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 같은 내용은 '12월 15일까지 낙농조합과 유업체간 원유공급계약 체결 완료' 라는 운영지침의 추진일정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다.
- 4 또한 급조된 운영지침은 농림부 시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지적을 차지하고라도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된 바 없는 사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말 그대로 걸은 '조합총량제 운영지침' 이지만 낙발협 논의자체를 완전 무시한 처사이다.
- 5 운영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농가피해를 담보로 오히려 오늘의 낙농문제의 주범인 현 진흥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는 것 뿐이다. 심지어 이관거부 농가에 대해서 진흥회 납유거부를 천명하는 동시에 집유비·검사비 유대포함, 쿼터양수도 제한, 계약초과물량의 소비홍보비 및 판매수수료 부과 등 자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가는 죽어도 좋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 6 이에 우리 청년낙농인들은 기본적인 농정원칙조차 무시하고 오늘의 이 같은 낙농혼란을 야기시킨 낙농진흥회의 공개사과와 낙농대책 수립전 일방적 직결전환 추진 등 농가 분열조장 중단 및 관련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사항과 진정성을 계속적으로 무시할 경우 어떠한 실행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 1. 18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